

국내 축산업, '동물복지' 대안으로 떠올라...

글 : 편집부
참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번 구제역과 AI 발생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산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겨울 매서운 바람과 함께 시작된 가축질병 발생은 금방 종식되길 원했던 우리들의 바람과 달리 좀처럼 사그라지질 않고 일파만파 커져갔으며, 가축질병의 예방 대책부터 사후처리까지 많은 여론들의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땅에 묻힌 가축은 900여만 마리. 전국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4,400곳을 넘어서면서 지하수·상수원에 이어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한국 축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및 EU 기준 동물복지를 소개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동물의 건강과 위생, 쾌적한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인증 농장에서부터 사육되고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 도축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식품에는 동물복지 축산식품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 마크만 보고도 손쉽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해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 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증된 축산농가에



축산수첩

국내 축산업, '동물복지' 대안으로 떠올라...

대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하지 않은 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사칭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부터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기준 마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동물복지 축산물' 비싸도 산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동물복지를 고려해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 등이 발표한 '농장형 동물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축종별 지불용의액의 추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87%는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해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2.3%가 축산물을 구입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생산된 것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93.7%)가 축산물을 구입할 때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랐는지에 대해 소비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조금 비싸더라도 유통란 등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통기업 중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풀무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여타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대가 약 30% 비싸지만, 동물복지 인증 마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으면서 판매율이 이전보다 약 50~60% 높아졌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조약한 우리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도살도 합부로 하지 못한다.

영국은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 동물 복지 상태에 따라 인증하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가 있다. '프리덤 푸드'는 1994년 제정되었으며,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로고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제도다.

9가지 동물에 대한 표준기준을 갖고 있으며, 주로 계란, 고기, 가금류, 어류 및 유제품에 대해 자체 표준기준이 적합한 상품에 대하여 프리덤 푸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영국 및 유럽에서는 인증상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인증 기준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다.

세계 축산의 벤치마킹 대상, 유럽의 동물 복지

유럽을 거론하면 빠뜨릴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동물복지다. EU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시발점은 가축이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사육, 수송, 도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의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다섯 가지 자유'는 이상적인 동물복지의 기본 조건으로 널리 정의되고 있으며 EU의 관련 정책은 이에 기초하고 있다.

• EU의 동물복지 5대 기본원칙

①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 적당한 양과 안전한 사료공급, 급수접근 용이, 사료 급여시 경쟁감소 등

② 편안함의 자유

- 편안한 휴식처 제공, 청결한 깔집유지 및 자유로운 공간 확보 등

③ 고통·상처·질병에서의 자유

- 상처나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속히 치료를 해야 함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적절한 시설, 동일 축종과 함께 사육

⑤ 공포·스트레스에서의 자유

- 사육 시 동물의 습성을 이해, 가축의 나이·성별·사회성 등을 고려

축산 및 가공업은 EU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006년 EU의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과 제품의 가치는 1,300억 유로(2006년 기준)에 달한다.

동물복지는 이러한 축산 행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동시 농촌 지역발전에도 기여한다. 공동 농업정



축산수첩

국내 축산업 '동물복지' 대안으로 떠올라...

책 하에서는 동물복지기준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최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EU의 동물복지지는 사육단계에서 운송·도축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가축에 대한 EU의 복지 기준

'가축 보호 및 복지 조약 의정서'

① 사육 단계: 사육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제정하였고, 산란계, 소, 돼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음. 2012년까지 모든 배터리식장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 산란계는 한 마리당 최소750c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이 규모 사육시설은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됨.

② 수송 단계: 2007년 1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규정은 운전자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음. 새 수송 차량에 대해서 8시간 이상 수송을 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수송과 중간 휴식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제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수송차량에 의무화됨.

③ 도축 단계: 적절한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도축 전 전기로 기절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음.

④ 개와 고양이 가축 추방: 2006년 EU집행위원회에서

는 개와 고양이 가축의 수출,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제안을 채택하였음.

⑤ 임상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 EU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적정 수준 이상의 동물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번식,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EU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동물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면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EU 차원에서 실시한 모든 동물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EU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와 식품 품질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환경에서 자란 가축의 육질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외국의 동물복지 인증제

① 영국 '자유식품인증제

(Freedom Food Scheme)

- 1994년부터 영국의 동물보호협회(RSPCA)에서 실시하는 농장인증 및 식품 라벨링제로서 가축의 생활개선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다.

소(육우·유우), 닭(산란계·육계), 돼지, 양 등 축종별로 가축사육단계부터 수송, 도축까지 복지기준을 설정해 준수시 인증제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에 의해 엄격하나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지며 지속적인 연구

와 정보수집으로 상시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② 미국 '자유사육인증제

(Free Farmed Program)

- 미국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아동·동물보호 자선단체인 미국인도주의단체(AHA)가 영국의 자유식품인증제(Freedom Food Scheme)를 벤치마킹해 200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이며 생산자 및 가공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제도로 AHA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기준은 수의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서 설정하고 있다.

동물복지제도는 좁은 축사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으며 각종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 채 사육되는 축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고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축산물 관련 인증제도는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유기축산,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이 대표적이다. 무항생제의 경우 2008년 인증 규모는 전체 사육두수중 7.3%, 유기축산의 경우 0.09%, HACCP의 경우 10.5%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축산업 선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금번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위기기에 놓인 국내 축산업을 반성하고, 이를 선진화의 기회로 일삼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 15일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전 축산업이 수익성을 높이고 규모화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 위주였다면 이제는 연구·개발에 기초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축산에서 동물복지·환경·녹색성장을 고려한 자원순환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가축질병에 인한 대규모의 살처분과 매몰이 식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가축뿐만 아닌 사람의 전염병 창궐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계기로 동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국, 동물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선진국들처럼 급격한 성장보다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번 가축질병의 파동은 그동안 구축한 우리의 축산기반을 도마 위에 올려놨지만, 한편으로는 동물복지와 소비자들의 행복한 먹을거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일수도 있다.

조속히 축산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이 국내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